

국민의힘, 이러려고 5·18 영령 앞에 무릎 꿇었나

‘아특별 개정안’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상정 거부 제2지역구 배정하더니 호남에 대한 애정 ‘헛구호’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호남에 현역 국회의원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던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애정이 ‘헛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별)’ 개정안을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회가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소위원장이 쟁쟁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목과할 수 없다”며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

을 주장했다. 이어 “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아특별’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별’의 개정을 놓고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주

기 대상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아특별’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의 취지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인력확보도 매우 어렵게 되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별’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양향자(서구)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아특별 파행과 관련 “국회 예산처에서 ‘추가 소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비용 문제를 들어 논의를 거부했다”며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 개인이었던가. 호남 챙기기는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당론조차 만들 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소협치가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코로나 종식위해 백신·치료제 공평 보급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도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

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이니셔티브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21일 비공개 회동

광주·전남 공동 현안, 초광역사업 등 상호 의견 조율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후 전남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역 상생과 협력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상호 교차 방문을 정례화하고,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2일 행정통합 합의를 위해 회동한 데 이어 20일만에 다시 만나 광주·전남 공동 현안, 초광역사업 등 광범위한 주제로 상호 의견을 나눴다. 또 그린 뉴딜, 디지털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광주와 전남을 잇는 대규모 초광역사업을 공동발굴하는데 합의했다. 초광역사업으로는 영산강 수변 정비에 대한 그린 뉴딜 적용, 탄소 감소를 위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의 광주 공급 등이 포함됐으며, 광주시의 시티투어와 전남도의 남도한 바퀴 통합 운영 등 관광 관련 과제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추후 다른 사업들도 마련해 상호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는 김

광휘 광주시 기초실장, 이남재 정무수석, 명창환 전남도 기초실장 등이 배석했다.

민간공향과 군공향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광휘 시 기초실장과 명창환 도 기초실장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해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대책 마련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향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 양상 역시 찾아볼 것으로 보인다.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은 “지난 2일 통합 관련 합의 이후 시·도의 간극이 상당히 좁혀졌고, 상호 충분한 이해를 전제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상생의 결과를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창환 도 기초실장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으로 갖는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정제 또는 지체돼 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도 상생이말로 전남도가 꾸준히 요청했던 사안이며, 이를 초광역사업 발굴로 이어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아파트 위주 난개발 않겠다” 거듭 강조

황룡강 주변 개발 사업자 공모 17개 업체 참여의향 접수

이용섭 광주시장이 황룡강 인근 평동 준공지역 일원 도시개발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장, 광주혁신추진위원

회, 시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을 열고 “취임 이후 줄기차게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해 왔지만 시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기관장들의 혁신의지가 크게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지만, 혁신 의지가 부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

리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민선 7기 3대 시정까지인 혁신, 소통, 청렴을 시 산하 공공기관이 강도 높게 실천해 시민이 바라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토론에서 이용섭 시장과 각 기관장,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청렴·혁신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관장들은 시민이 믿고 바라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려야 하고, 빠른 걷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시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평동 준공지역 일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일가죽 교통사고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평동 준공지역은 지역주민의 개발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공모에 들어갔는데, 일부에서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위한 난개발 계획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차례 공언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물론 개발사업과 관련한 어

떤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정은 일절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일 평동 준공지역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다. 지역 내 4개 업체, 지역의 13개 업체다.

업종별로는 건설 10개, 금융 2개, 부동산 5개다. 사업 참여 의향만을 밝힌 단계로, 내년 1월 29일까지 접수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광산구 지족동 139만5천 553㎡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 거점으로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직주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World Top K-water!

대한민국의 내일이 좀 더 즐거워지도록, 좀 더 행복해지도록!
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